

與 “반도체 특별법 통과 절실” vs 野 “추경 편성 시급”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與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 확보 필요 보상·합의하에 52시간 적용 예외”
野 “대통령실만 추경예산안 반대”
崔 “국정협의회사 기본원칙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 /뉴시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등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

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밀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

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

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지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독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지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짜구였다. 천재 짜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짜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짜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35조 규모’ 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 AI 반도체 5조 투입”

민생회복 24조, 경제성장 11조 편성
“항목 모두 관철돼야 하는 것이나 유연하게 임할 것… 與 편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허영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에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뉜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

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 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비명계 끌어안기… 통합행보 본격화

김경수 이어 임종석·김부겸 만남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를 인사를 차례로 만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내놓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본격적인 통합 행보를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평가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관련 징역형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탈당했으나, 최근 다시 복당했다. 김 전 지사는 최근 공개적 발언을 통해 이 대표에게 당 내 통합과 포용력 발휘를 요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지사에 대해 “현정 수호세력을 한데 모으고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 대선 국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

기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범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에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만남 이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비판하는) 분들의 역할도 찾아 만들어 드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경쟁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를 향한 날선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이재명계가 주도하는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포럼’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놓고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대선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與野,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사건 발생 원인·방지책 물을 방침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할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특히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당도 교원 질 관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